

여야, 8월 국회서 ‘구하라법·간호법’ 처리 합의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전세사기특별법도 조정중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이견
국민 25만원 지원법도 대립

여야는 8일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등 의견 차가 작은 비쟁점 법안을 8월 국회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도 쟁점이

없고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하라법은 가족 간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결여된 경우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상속권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후 22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다시 발의됐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

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강 대 강 여야 대치 정국을 돌파할 계기로 기대를 모았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 협의는 빈손으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를 조건 없이 구성해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제안한 영수회담이 우선이라며 온도차를 보였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어서 쟁점 법안 등을 제외하고 여야가 별 무리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여야정실무협의체를 통해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서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한 전제 조건은 대통령 이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위기 극복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여야 영수회담을 해보고 그런 가운데 대통령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원내대표도 (협상에) 초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만 있을 때 과연 여야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양측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

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두고도 대립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추석이 오기 전에 새로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금 선순환 구조가 필요해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했다”며 “정부 여당이 이에 걸맞은 민생 회복 관련 법안을 만드는 모습이 없는 상태에서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진정성이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는 이 법을 현금살포법이라고 부른다”라며 “소비는 진작하더라도 결국 물가를 올릴 것이고 (법 내용에) 위험적 요소도 있다”고 맞받았다.

서울=김선욱 기자

정진욱 “배민, 獨 본사만 배불리는 수수료인상 철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사진)은 8일 “‘배달의민족’(배민)의 배달 수수료 인상(현행 6.8%→9.8%로 인상)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독일 본사의 배민 불리는 수수료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중소상인·자영업자가 매일 폐업을 고민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배민은 지난해 영업이익 7000여억원도 모자라 배달수수료 인상으로 수익을 더 가져가려 한다”면서 “중소자영업자의 고통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상생 방안이 오는 10월에 나오는 만큼, 그때까지 수수료 인상을 보류하라”고 제안했다.

배민은 10일부터 배달수수료를 인상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특히 “공정위는 허울뿐인 업계 자율규제 방안을 실효적으로 개선하고, 배민과 쿠팡 등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불공정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사전 행정규제’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일 정 의원과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 및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피터안반데피트 대표이사과 함윤식 부사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피터안반데피트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쿠팡이츠 등 배달앱 플랫폼 업체들과의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배달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당, 순직해병특검법안 제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8일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문금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개정안 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은 8일 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조 원에서 3조 원으로 상향하고 31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한시조항을 폐지했다.

또 기반시설 사업으로 제한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활성화펀드와 같은 특정 용도로의 과도한 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해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의 인구소멸을 방지하는 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지방소멸은 중앙 집중적, 수도권 위주의 대응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제 지방 문제는 지방이 주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회, 16일 의대 정원 증원 연석 청문회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6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연석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교육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복지위도 청문회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를 구성기로 했다.

교육위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인으로 구성하고, 복지위 소위원회는 10명이 참여한다.

두 상임위의 청문회는 ‘2000명 의대정

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문회와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한 교육부 청문회 요청’ 청문이 국회심의 요건인 5만명을 넘어 열리게 됐다.

위원들은 청문회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의대 증원 정책 추진과정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청문회 증인으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장상운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채택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전남도의회 농촌발전연구회, 연구용역 착수

기초생활서비스 확충방안 마련
지역 현황 파악·조례안 등 추진

전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농촌발전연구회가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착수했다.

농촌발전연구회는 지난 7일 전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남 농촌지역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열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정책 제시에 나섰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농촌 인구감소

에 따른 심각한 소멸 위기에 놓인 전남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확충방안 마련 및 연구 방향이 논의됐다.

정영균 대표의원은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든 정부로부터 필요한 기초적인 서비스를 불편 없이 누리며 삶의 질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전남 농촌지역의 공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전형형 기초생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이번 연구용역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인구가감소하는 농촌지역에서는

주민의 경제활동 저하 및 구매력 감소로 인해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기초생활서비스의 양적·질적 저하가 발생되기 쉽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초생활서비스가 공공형 성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발전연구회는 정영균 의원(순천1)을 대표로, 김태균(광양3)·김성일(해남1)·최명수(나주2)·최병용(여수5)·한준욱(순천2)·최무경(여수5)·김정희(순천3)·정길수(무안1)·이규현 의원(담양2)으로 구성됐다.

오지현 기자